다산포럼

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세월호 참사 직후 You Tube를 통해 한 용인외고 1학년 학생의 다음과 같은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들었다. “모든 사람이 침통해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소위 말하는 SKY대를 많이 간다. 이렇게 공부해서 외교관, 법조인이 되면 뭐하겠느냐. 어른 되기가 무섭다….”

구조될 수도 있던 아이들 300여 명이 찬 바다에 빠져서 죽어 가는데,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봐서 정부 고관, 정치가, 기업가, 기자가 되라는 학교. 그런데 공부 잘해서 출세한 어른들이 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구조에 제대로 책임지지 않거나, 계속 거짓보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

나는 80년대 초 ‘알 수 없는 이유로’ 나 정도의 ‘가방끈’(?)으로는 통상 가지 않는(?) 최말단 포병대대까지 ‘밀려가서’ 훈련과 작업(노동)으로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소수의 4년제 대학 재학자들과 대다수의 고졸, 전문대 출신들로 구성된 포병 중대에서 그동안 학력·학벌 사회의 기준에서는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아 온 내가 거의 모든 일 처리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존재인가를 매일 참담하게 체험했다.

그런데 이 훈련과 작업에서 내가 뒤처짐의 굴욕을 맛보거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곧바로 도와준 전우들은 대학 출신자들이 아니었다. 세상에서는 열등감을 갖고 살았을 그들이 군대에서는 옆 사람 고통을 돌아보면서 위험에 앞장서는 고참들이었다.

4년제 대학 출신들은 자신이 욕을 덜 먹기 위해 쫄병들 못살게 구는 경향이 있었지만, 학력이 낮고 가난한 가정 출신 고참들은 겉으로는 난폭하게 행동해도 자신이 군대생활 편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는 않았다.

물론 나의 제한적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바닥’ 일과 ‘바닥’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우리 사회에서 시험·입시경쟁에 더 많이 시달리면서 승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실감했다.

서열 매기는 평가, 입시전쟁,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성공한 사람에게 평생토록 주어지는 과도한 사회적 보상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틀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시험, 경쟁에 덜 매달렸던 사람들이 막상 집단의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더 앞장을 서고, 타인의 고통에 더 쉽게 공감한다는 것도 겼었다. 한국식의 학교, 입시제도는 인간성을 마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과거시험이 조선을 망쳤다”고 했지만, 나는 일제가 만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는 한국의 성적서열 매기기, 입시, 고시제도가 한국의 식민지제도와 군사독재, 재벌주도의 승자독식 천민자본주의를 지탱시켜온 기둥이었다고 생각한다.

고시, 입시 등 암기시험의 승자들은 강자들에게 복종해서 비상식적인 부를 챙기고도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반면 실패한 자들은 체념과 트라우마, 자살의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80%이지만, 중·고등학교에는 배움의 즐거움이 없고 대학에는 학문이 없다. 스스로 만들어보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학교, 자기가 원해서 책을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공부, 그런 것이 없는 나라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욱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13개 시·도에 걸쳐 ‘진보’ 교육감이 당선돼 파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 스트레스, 입시경쟁, 사교육 부담이라는 터널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승리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터널이 숨막혀 죽겠다는 비명소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과 학교를 경쟁과 출세의 장으로 보기보다는 즐거움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학부모의 작은 열망이 표현된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만 있으라”는 말에 복종하고, 입시경쟁을 내면화해야만 기성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진보’ 교육감의 당선을 ‘전교조의 승리’라고 비틀고 편 가른다.

새 교육감들은 교육관료, 교총, 사학재단, 입시학원, 보수언론, 명문고·명문대 동문들이 만든 이 거대한 이익 카르텔은 물론 한국인들의 내면화된 경쟁, 서열주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과도 맞서야 할 것 같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갈 길이 험난하게 보인다.

NGO 칼럼

성폭력 피해자가 위장전입자인가요?

백 희 정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80% 성폭력피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빈도, # 88% 친족성폭력(친부, 의부, 오빠)의 비율, # 15% 성폭력피해자 평균 연령

위의 숫자는 현재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다솜누리, 이하 쉼터)에 입소해 있는 생활인들의 현실이다.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막연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다솜누리는 올해로 개소 10년이 되는 비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로 현재 8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초등학생 피해자도 적지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피해를 당했으며 친부·의부·오빠에 의한 강간·추행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어 쉼터로 긴급 보호조치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쉼터는 법률에 의한 비공개 시설로 이 아이들이 최장 고3 때까지 지낼 수 있으며 숙식제공은 물론 의료, 법률, 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쉼터에 오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경우가 전학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초·중학교 전학은 가족의 이사와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하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친권자이며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도 쉽게 그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피해자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가 ‘내 자식 내가 데려 가겠다’며 입소동의 및 기타 제반 서류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피해자는 쉼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쉼터는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해 학교장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지는 전학은 교육청의 환경전환 대상자 전학 절차에 따르는데 학교장 추천서외에도 보호자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 외에도 관할 교육청의 담당 부서장의 의지와 인식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 달이 넘도록 전학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생계부양자인 오빠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경우인데 현재 가해자인 오빠는 교도소에, 친권자인 엄마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경우이다.

관할 교육청 담당자에게 비밀 전학을 문의했을 때 반드시 부모와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며 전학 문제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전해 들은 적도 있다.

성폭력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신분이 노출되는 것과 피해자도 잘못이라는 사회의 인식과 부단한 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쉼터에 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폭력피해자들 보다 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어린 청소년이 피해를 입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주어진다.

성폭력피해자는 위장 전입자가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장은 전학, 피해자 보호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관할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최소한의 서류로 전학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

기 고

‘재난관리체계 과거로 회귀’ 안된다

백 은 선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안고 정부의 후속대책을 기다려 왔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선진화된 재난관리체계가 갖춰지리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소방방재청의 와해다. 2004년 대구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탄생한 소방방재청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재난안전관리는 현장대응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대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소방방재청은 위상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없어지게 되었고, 그 대신에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정부 무능의 중심에 있던 안전행정부는 대통령의 조직축소 천명에도 불사신처럼 되살아나 국가안전처의 중추기능을 맡게 되었다. 이는 현장대응 조직보다는 보고서 작성 조직이 우선되고, 현장대응조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경시해 온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조직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여건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노후화된 장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기와 유독가스, 불구덩이 화마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삼아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했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도 소방조직은 국민과 아픔을 같이했다.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해상 심해구조 작업, 인양된 사체 운구, 수변지역 순찰, 유가족 편의제공 등을 수행하며 24시간 뜬눈으로 국민을 지켰다. 그런데, 차디 찬 바닷바람 속에서 가슴속에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이겨낸 결과가 소방조직 구심점 해체라니 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한 일인가?

소방업무는 기동성, 집중성, 기술성 및 명령지휘체계가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영역임에도 정부조직개편은 업무의 성격과 조직의 생리가 다른 방재와 일반행정 조직 속에 포함시켜 버렸다. 소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미래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대응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관된 견해다.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한다. 하지만 소방조직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지방 소방공무원과 국가안전처의 지휘를 받는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따라서 시·도 소속의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와 국가안전처장의 이중적 지휘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 형태로써,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안전을 맡고 있는 조직 중에서 해경, 경찰, 군은 모두 국가직이지만 소방조직은 극소수 일부만이(0.2%) 국가직이고 대다수(99.8%)가 지방직이다. 이로 인해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방서장이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지휘·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방업무의 72%가 국가사무임에도 소방분야만 국가·지방직 신분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장비와 인력도 천차만별이라 전국 소방공무원의 이질감과 소외감도 증폭되고 있다.

소방조직의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및 지휘명령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청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거울삼아 앞으로 국가안전처는 재난현장의 초기대응기능을 강화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난예방대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하여 수립 추진하고, 재난현장대응은 각 부처정보를 공유하면서 육상에서의 재난은 소방조직이, 해상에서의 재난은 해경조직이 관장해야 한다. 재난현장 전문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전문대응조직으로 개편해 재난초기 현장수습을 위한 전문기동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현장중심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기본과 원칙이 중시되고, ‘안전은 미래’다는 근본의식을 바꿔 우리사회가 진정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지역 경쟁력 강화로 시정과 도정에 변화를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패러다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장의 경우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당선자가, 전남지사에는 ‘혁신’을 주창해 온 이낙연 당선자가 취임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기존 능률 위주의 수직적 행정시스템에서 벗어나 소통을 중시하는 수평적 행정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롤모델로 제시해 온 만큼 ‘시민과의 소통행정’이 핵심 시책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시민들과 허물없이 만나고, 가깝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협력하면서 광주를 민주·인권·평화가 빛나는 대한민국의 모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온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기 위해 ‘혁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F1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친환경농업에 이르기까지 사업별 공과를 따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당선자도 “활력과 매력, 온정이 식어가는 전남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행동하는 혁신 도지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민선 지방자치가 20년째 접어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더욱이 민선 5기 때처럼 시·도의 관계가 갈등의 연속이어선 곤란하다. 두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공동정책 추진을 약속한 만큼 소통·상생의 광역행정이 기대된다.

민선 6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자체 간 무한경쟁 속에 이젠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의 기조와 방향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박 정부 인적 쇄신은 탕평인사가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곡성 출신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새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해 지체된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적 쇄신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박 대통령이 얼마나 변했는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또 흔들린 민심을 추슬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개편 내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1기 인사는 이른바 수첩인선에서 비롯된 깜깜이 인사, 낙하산에 따른 무능력 인사, 특정지역 편향 인사 등으로 인해 국정 혼선과 난맥상을 빚은 게 사실이다. 특히 호남 인사 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산에 대한 호남 소외도 뚜렷했다.

총리 및 장·차관급과 4대 권력 기관장, 청와대 수석 이상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은 찾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PK(부산·경남) 인맥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전두환·노태우, 이명박 정권에서조차 없었던 일이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3년 8개월여 호남은 암담할 따름이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인적 쇄신은 변화와 소통이다. 거기에는 인사 대탕평을 통한 대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확인된 민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 자신부터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인사라면 쇄신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는 특정지역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능력과 전문성,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지닌 인물을 중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이 아닌 쌍방소통의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대통합 정신에 부합하는 탕평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흥 커피

“나는 가비의 쓴맛이 좋다. 왕이 되고부터 무얼 먹어도 쓴맛이 났다. 헌데 가비의 쓴맛은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 구나.”

지난 2012년 개봉된 영화 ‘가비’(감독 장윤현)에서 고종 황제는 커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영화는 커피를 소재로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俄館播遷) 사건이 일어난 1896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사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가비는 커피를 음역(音譯)한 한자말로 ‘카페이’라고 읽는다.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앞서 유입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세기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커피는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호 음료가 됐다.

지난해 7월 관세청이 발표한 ‘커피 수입 동향’에 따르면 2012년 커피 총 수입량은 11만5000t으로 나타났다. 이를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로 나누면 성인 1인 당 연간 293잔(미국산 아메리카노 커피 10g 한잔 기준)의 커피를 마신 것과 동일한 분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같은 해 커피생두 수입국은 베트남(35.3%), 브라질(19.9%), 콜럼비아(12.0%), 온두라스(9.1%), 페루(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는 커피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적당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남·북위 25도 사이 ‘커피벨트’(Coffee Belt)에 속해 있다.

고흥지역 농업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커피’ 생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고흥 열대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들은 지난 2009년부터 커피 국내 재배에 뛰어들어 시행착오 끝에 2011년 30kg, 2012년 50kg, 올해 80kg의 아라비카종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4월에는 ‘고흥 우주항공축제’ 행사장 내에 부스를 열고 ‘고흥산 커피’를 판매해 관광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고흥산 커피’가 유자, 석류, 참다래 등과 더불어 고흥지역의 대표 작목으로 자리잡을 날도 머지 않은 듯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